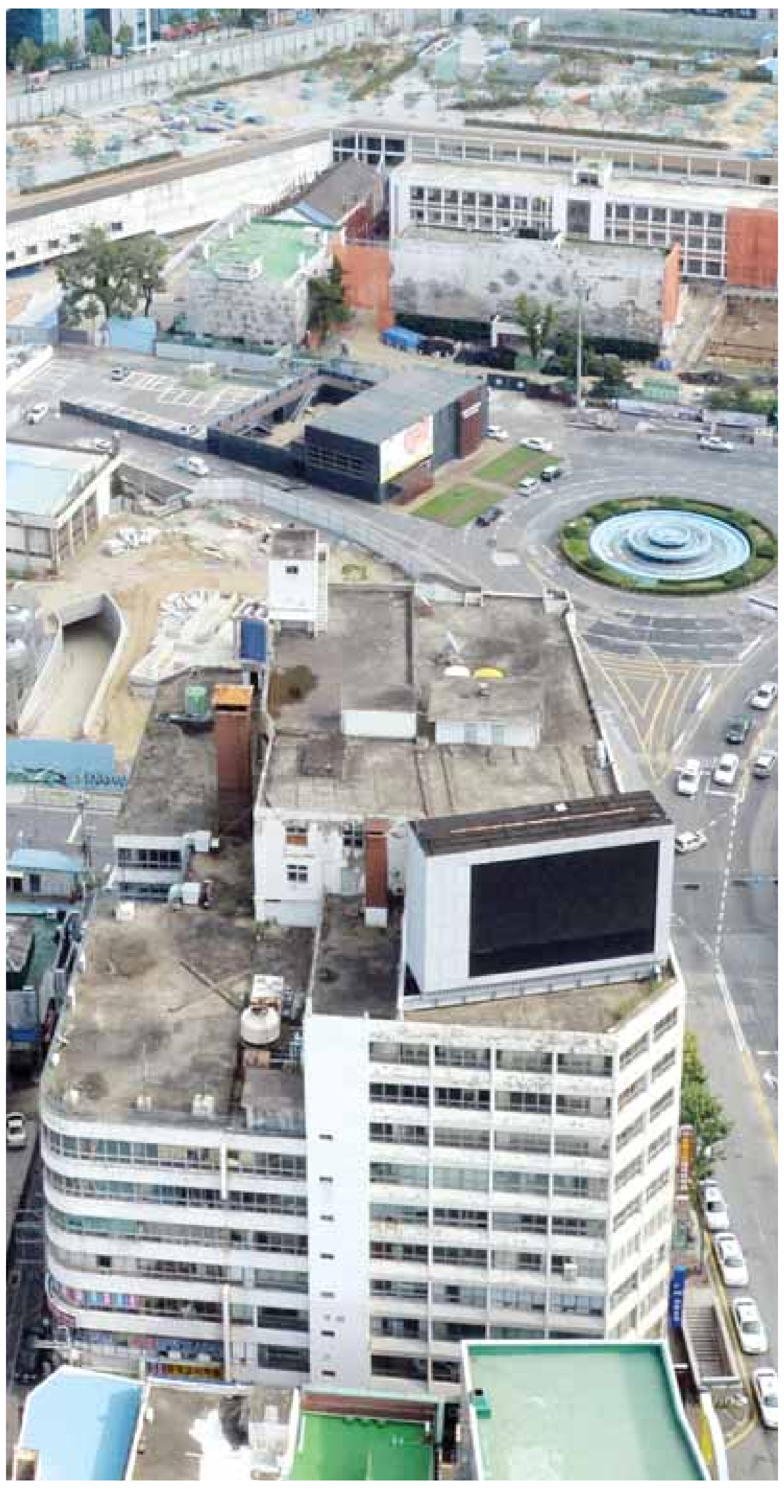
F1·이홍하 보석·영산강 녹조…큰 건 많아 의원들 목청 커질 듯



미리보는 광주·전남 국감 이슈

F1, 국비 등 1조288억 소요 집중 거론
임용고시 재시험 사태 질타 쏟아질 듯
수영선수권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 추궁
이홍하 보석 허가 기준 싸고 집중 질타

전남도청과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 법원·검찰 등 지역의 주요기관에 대한 2013년 국정감사가 오는 21일부터 실시된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은 광주시청은 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기관별 국정감사 이슈를 점검해본다.

◇**전남도청**=전남도는 오는 28일 안전행정위원회, 3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와 관련 영암 F1 경주장 인수를 위해 전남도가 29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해마다 이자만 100억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등 4차례 대회를 치르면서 누적적자만 2000억원에 달하고, 국비 1001억원 등 1조288억원을 낭비한 점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F1 주관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 지난해까지 개최권료만 1373억원을 지급한 뒤 뒤늦게 개최권료 인하 협상을 벌이는 등 전남도의 'F1 행정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함평 파충류 생태공원, 거북선형 유람선 등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과 지시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대형 보조사업들도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여수시청 공무원이 80억원을 가로채는 등 공무원 횡령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한 전남도의 부실한 감사 시스템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농어업 보조금 횡령과 전남도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중점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25일 국정감사를 앞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

지난해 '성적조작 채용비리 직원 두둔'과 '아파트 임대 수익' 등으로 질타를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도 혹독한 국정감사를 받아야할 처지다.

먼저 무리한 징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 중 파면으로 과잉징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뇌물수수 혐의 직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다, '명절 떡값'을 받았다가 해임됐던 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으로 양형이 낮춰졌기 때문이다. 또 사립학교에 대한 보복제재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해 소송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감독관 실수에 따른 임용고시 재시험 사태, 중·고생 과학경시대회 입상자 뒤죽박죽, 고교 신입생 무더기 강제배정 등 미숙한 교육행정에 대한 질타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심성 교장단 공짜 해외 연수와 교육감후보 양보 공방 등 내년 선거를 앞둔 장휘국 교육감의 행보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특히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학력저하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장들의 잇따른 성추행·성희롱 등 성관련 물의가 입방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계약직 여강사의 몸을 만지거나, 여교사·학부모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황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기숙형 중학교 설립 후퇴, 순천 고교생 막말 파문 등 학교폭력 대책, 최근 6년새 2배 늘어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도 관심사다.

◇**광주고·지법, 광주고·지검**=23일 열리는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고검, 광주·전주·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이다. 사법기관은 통상적으로 2년마다 국감을 받는다.

광주지법과 고법의 경우 국감 단골 사안인 보석허가 기준, 지역법관제, 양형 기준 준수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여론에 밀려 재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의 사례가 있어 보석허가 기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의 강도높은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검의 경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한빛원전 보증서 위조 사건, 5·18 역사왜곡 사건 등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적정성 및 진척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사안에 비해 과도한 수사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전국 8개 지역 환경청과 합동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는 영산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전역에 걸쳐 심각한 녹조가 창궐한 만큼, MB정부 때부터 문제로 거론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여수시 율촌면에 내린 '검은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릉, 포항 등지서 산업단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여수·영암 등 산업단지 방제 대책도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경우 환경부에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방제 대책은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일빌딩 어떻게?

광주시가 금남로의 상징건물인 전일빌딩의 일부를 리모델링하기로 하면서 활용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전일빌딩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일빌딩을 신문박물관으로"

활용방안 논의 활발 … 문학관·유스호스텔·예술인 창작공간 등 제안

광주시청서 민관협의회의

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전일빌딩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의에서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학관을 비롯한 광주의 근현대사를 조명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집적할 수 있는 언론(신문)박물관,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전일빌딩 일부 존치가 아닌 전체를 리모델링하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광주시는 참석한 20명의 협의회원들에게 전일빌딩 2만2470㎡ 중 1만2105㎡만 존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존치되는 건물은 지난 1974년 건립한 지하 1~지상 10층(1층 외환은행 포함)이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철거 10억 5000만원 등 135억원이며, 공사기간은 1년 6개월이다.

■ 전일빌딩 현황 및 보존안

· 위치: 동구 금남로 1가 1-1외 3필지
· 규모: 부지 2,778㎡(840평), 건축연면적 22,470㎡(6,797평)

□ 위치도

구분	건립연도/층수	연면적(㎡)	보존안
1차	1965(지상7)	2,513	철거
2차	1970(지하1/지상7)	4,028	철거
3차	1974(지하1/지상10)	12,105(외한은행 2,338)	존치
4차	1980(지하1/지상10)	3,824	철거
계		22,470	

이날 협의회원으로 참석한 소설가 문순태씨는 "문인들 유물 전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예창작 공간과 공연공간, 독서 공간, 출판공간 등 다목적 종합문학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상열 문화도시협의회장도 "문학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범위가 상당히 큰 만큼 광주·전남 출판물을 집적하는 공간과 1층에는 문화 관련 제품을 파는 상점이 들어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은 "전일빌딩 재활용 방안이 논의된 것은 건물의 상징성 때문이며, 대표적인 지역 신문사가 있었던 곳인 만큼 신문 박물관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기 국장은 "단순하게 언론자료를 전시하는 작은 의미의 공간이 아니라 광주의 근현대사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와 전일빌딩이 5·18의 역사를 함께했던 건물인 만큼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여기에는 문화전당과 함께 대시민 언론미디어 교육 장소 및 미디어 산업 발전 공간도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성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일부만 존치할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활용해 광주를 상징하는 종합문화센터로 활용했으면 한다"며 "특히 일제시대부터 신문사가 있었던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언론 박물관 등을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과 숙식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면서 "문화전당을 방문한 외국 예술가 등이 여러날을 머물면서 모텔 등을 이용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2차 민관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종합한 뒤 추가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이 걱정이라도 없게 비나이다